

“유럽정체성과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연사: 신종훈(경상대 사학과 교수)

사회: 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일시: 2014년 1월 16일(금) 4:00 - 6:00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대 사회의실

<강연>

신종훈: 독일에서 유럽통합사를 전공하면서 1950년대 중후반 최초의 유럽 경제공동체 창설과정을 정치사를 공부했는데 나중에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계속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동아시아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유럽전공자가 동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의 허점, 공허한 점을 나름대로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 전공자가 일종의 반성적 거울로서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비판적인 문제제기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표 내용은 유럽정체성과 유럽 통합의 문제로서 크게 두 가지이다. 저는 EU를 ‘괴물 기구’라고 생각한다. 정치경제적 특정 기구가 마련되었는데 EU에 대한 해명을 위해 여러 관점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중의 한 초점이 정체성 연구이다.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가 첫 번째이고 유럽정체성과 유럽연합의 상관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반성적인 방향, 거울이 될 수 있는지가 두 번째 파트이다. 한국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담론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빠르면 1980년대 중후반, 199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났다.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되고 현실적인 EU라는 조약이 창설될 때 유럽에 전혀 다른 기구가 생기면서 정체성 연구가 진행되었고 나름대로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다. 유럽 정체성의 물음은 냉전질서가 와해되고 냉전기 동안 서유럽 통합 중심으로 유럽 통합이었는데, 냉전 종식 이후 서유럽 중심 기구가 동유럽 품으려고 할 때 또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전환의 시기, 유럽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 유럽이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90년대 초중반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의 필요성을 타진하는 목소리, 담론들이 활발히 제기되었다. 그 배경은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시아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아시아 공동체의 담론이 제시되었다. 그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닳을 내릴 수 있는 중요초점이 유럽공동체였다.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서 닳아야할 모델을 대부분 EU를 상정하였으나 유럽공동체를 너무 모르고 피상적인 것들만 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하 발표 논문 내용 참조)

<토론>

전재성: 긴 역사적인 유럽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이야기해주셔서 공부 많이 되었다. 동아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논점이 있는 것 같다.

신옥희: 동아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데 동의는 하지만 동아시아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현실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과 달리 cooperate identity가 아니라 conflicting identity가 생기고 있는가? 결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유럽은 유럽의 국가를 식민화한 경우는 없다. 결국 근대의 경험, 외부에서 부과된 근대의 경험이라는 것이 동아시아가 현재에 가지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한 번도 동아시아인적이 없다는 것은 근대 때문이고 일본이라는 'colonizer'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시아가 갖는 근대의 차별적, 일본을 제외하고는 순응적인 agent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왜 갈등적인가에 원인에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일본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일본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역사는 공유하지만 해석은 다르게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구성주의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 새로운 idea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다. 개별 국가의 idea에 좀 더 천착을 해봐야 하는데 idea는 크게 세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한다. primordial한 것, 구성되어 지는 것, 전략적, 정치적으로 동원되어 지는 세 가지가 혼합되어 진다고 생각한다. 민족주의가 정말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구성인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민족주의는 primordial이 많고 지역주의는 구성되어갈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 앤더슨처럼 과연 민족주의도 다 구성되는가, primordial은 없나. 동북아의 민족주의는 근대적이라고 봐야 하는가? 그 이전까지 봐서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유럽과 다르게 병존하였고 idea가 덜 공유되면서 다른 차별성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미래에서 지역주의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막연히 잘해야 한다고 보기엔 동아시아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옛 사고도 더 비판적. 여전히 전략적일 수밖에 없고 국내정치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저는 idea는 몰라도 여전히 제도와 기능적인 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 때 유럽 경험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동시대의 경험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냉전기의 CSCE 등 제도, 기능에 있어서는 배울 것들이 있다. 전 외교학과 이용희 교수의 "미래의 세계정치"의 책에서는 지역이 국가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선 낙관적인 입장이다.

신종훈: 미래에 낙관적인 측면에서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낙관적으로 본 것은 사실 글에 수를 쓴 것이다. 너무 안 된다고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선 만약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idea,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특정 기구를 만들 수 있다면 낙관적이다. 그 이후의 정체성을 구성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쉽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연결되어서 '일본' 역사적 근대의 경험적인 차별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식민지가 있었고 유럽의 역사 자체가 내부의 식민화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 안에서 네덜란드 민족주의가 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도 식민은 아니었지만, 독일이 근

대 국민국가 창설의 장소를 프랑스 자존심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프랑스인들이 정말 와신상담을 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2차 대전까지 갔다가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것이 나왔다. 최초의 초국가적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서독과 프랑스의 화해이다.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하면서 공동의 역사를 다시 서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유럽 각각 각자의 역사를 썼다. 그전까지는 독일, 프랑스도 공동의 역사? 샤를마뉴, 카를 대제라는 공동의 조상을 가졌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재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상처, 피해의식이 남아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정치인, 집단들이 못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절박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 idea로서의 유럽과 구성되어지는 유럽 정체성이 다르다 보고 동아시아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하였따. 역사는 공유하나, 해석은 공유하지 못하는 동아시아의 이야기인데 해석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2차 대전 이후의 유럽통합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대내외적 환경의 필요성이 있었고, 각국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구, 제도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기구,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체성을 담론, 노력으로 만든 것을 볼 때 동아시아 공동체 또한 언급했듯이 필요성을 공유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에도 낙관적으로 볼 수 이싸고 생각한다.

질문: 더 비판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도의 문제인 것 같다. 물론 동아시아와 유럽의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 접근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 상황이 있어도 이를 어떻게 개별 국가들이 받아들이는가의 자세가 차이를 더 심화시키게 되는 것을 가져오지 않나. 독일도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치부도 잘 보존하고 교육을 통해 알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데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는커녕 더 우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이 자체로서의 담론적인 논의를 갖고서는 구체적인 idea들, 방향성을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저의 박사논문의 주제가 미래 지향적인 유럽정체성을 문화정책에서 EU가 만들어가는지를 연구 중이다.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오게 되었다. 저는 오히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무역, 경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논의를 많이 하는 것 중의 대표적인 이슈가 한중일 FTA이다. 유럽도 사실 대외적인 명분은 전쟁, 평화에서 출발했지만 구체적인 action을 취하게 된 것은 경제에서 시작하였고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치통합으로 연결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 컨텍스트가 다르지만 정치적, 역사적으로는 어떤 시의적인 것에서 초점 두는 것, practical에서 나가서 점차 교류와 토론의 장을 넓혀서 자연스럽게 포용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종훈: 말씀하신 부분은 기능주의적인 관점인데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많은 담론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 국제협력에서의 기능적인 협력이 더 큰 협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신기능주의는 유럽통합의 Grand history로 갔다는 것이다. 국제협력은 평등, 호혜가 있어야 하는데 한 쪽이 너무 큰 무게중심이 있을 때 어렵지 않나?

윤석준: 유럽정치학자들과의 이야기를 하면 기능성 의류를 입은 느낌이고 역사학자들은 잘 짜

여진 면 조직의류를 입은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하신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첫 번째는 규범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유럽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누가 인식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사실 2007년 유럽헌법 좌절의 큰 이유는 브뤼셀 중심의 유럽통합의 인식과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는 것이고 속도조절의 차원에서 좌초했다. 저는 논문의 233페이지의 글에 나온 유럽연합 관련된 책을 보았는데 프랑스에서도 이런 책들이 있었다. 500년 정도의 다양한 유럽통합에 대한 책. 문제는 대부분의 논의들이 소위 소수의 엘리트들의 이야기들, 생각들이었다. 과연 그 오래전부터 평범한 유럽의 사람들, 유럽으로서의 정체성들을 느껴왔는가? 느꼈으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는가? 피케티도 그 쪽, 프랑스에서의 ENS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은 당시의 문학작품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유럽정체성을 어떻게 찾았는가? 유럽연구자들은 그런 것들을 개별작업들로 하고 있다.

저는 파리 유학 시 동양인은 저 혼자였음. 그들이 생각하는 유럽과 내가 생각하는 유럽은 달랐다. 문제는 그 친구들은 '유럽'이라는 무엇을 갖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 '에우로빠'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 바람둥이 제우스가 소로 변해서 에우로빠를 겁탈한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박물관에 가면 그 그림이 있다. 모든 오래된 건물들에 벽화, 조각 형태로도 남아 있고 유럽인들은 너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접해왔던 신화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느낀 유럽 정체성들은 문학, 미술작품 등 이런 것들을 통한 교육기제가 있었을 것임이다. 그 이후에 유럽 정체성을 가진 규범적, 정책적 함의도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엄밀히 유럽 정체성과 유럽통합,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함의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의 논의들을 follow-up 못하고 있다. 폴락이라는 미국 정치학자들은 왜 주권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초국가 정치체에 주권을 이양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 idea를 뺀다면, 가장 정치학적으로 함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신종훈: 누가 인식하는 정체성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Forest의 책에서 보면 시대마다 유럽을 인식하는 주체들이 달랐다고 한다. 근대 유럽에서는 유럽 궁정들만 유럽을 인식하였고 대중들에게 유럽 사회는 없었다. 유럽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19세기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european civil society는 유럽연합 이후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엘리트 들과 대중들의 격차가 심하다. 누가 인식하는, 누가의 identification인가도 너무 크다. 정체성은 self-definition인데 타자의 시각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의 중심, 다중심적, 다극적인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 유럽사가 그러 했고 유럽사도 다양했다. 유럽사가 민주주의, 인권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나? 홀로코스트도 더 내세울 수도 있다. 유럽에서 배제된 타자들, 유대인, 이슬람들에 의해 세워진 유럽. 그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유럽 정체성이 더 이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기여라고 생각한다.

윤석준: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논의할 때 함의를 줄려는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유럽에서 엄밀히 헌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유럽연합이 법인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유라툼을 서명했다. 전후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주권국가들이 주권을 자발적으로, 초국가적인 상위체에 양도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정치학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함의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신종훈: 주권양도에 대해서는 밀워드(Alan Milward)라는 경제사학자가 그 틀을 만들었다. 이전에는 유럽이상주의에 의해 주권양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생존, 자기구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을 통해 더 얻은 것들이 있었다고 본다. 동아시아의 경우엔 그런 식의 접근은 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하지만 경제, 환경, 에너지 등의 협력 협의체들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화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질문: 외부로부터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동아시아'라는 논의에서 동아시아는 불리하다. 아시아라는 정체성은 서양으로부터 규정된 정체성이므로 서양/동양으로 접근하는 것이 동아시아정체성을 찾는데 한발 더 나아가지 않나? 역사적 정체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대학, 종교를 통해서 푸셨다. 동아시아에서는 절, 사찰 등 일본, 한국, 대만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미래에서 과거에서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시 쓰여질 수 있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묶어냈다고 보이는데 '동아시아' 담론을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들을 집합해본다면 유럽만큼 동아시아의 것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쟁할 수도 있고 여기선 하나의 정체성, 시대에서의 하나의 정체성만 이야기하시는데 정체성들은 역사적으로 경쟁해왔다. 공동체라는 정치적인 조직이 있다면 정체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구성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구원', 일본의 국내정치, 미국의 역사적인 역할, 중국의 헤게모니가 더 확장되어서 동아시아를 유럽의 바라보는 시선인데 지금의 헤게모니가 중국 중심으로 확장되면 구원들이 풀릴 수도 있을 듯 하다. 한반도, 이념이 냉전에 여전히 갇혀있다. 누구에 의해 풀리는가? 정체성은 계속 경쟁하고 있으므로 한국 내의 경쟁하는 정체성, 중국, 일본 내의 정체성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서 경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희망적일 수도 있다.

질문: 터키는 계속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므로 문화권 차원에서의 앵글로색슨의 정착된 유럽의 지도자들이 반감을 갖는 것도 맞다. 이것에 덧붙여서 오히려 터키가 인구가 많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지 않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투표인데 독일 다음으로 많이 투표를 분담해야 해서 터키가 큰 정치공동체이므로 EU의 방향성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신종훈: 주요한 거버넌스 문제인데, 유럽이 민주, 평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이 여전히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중심이고 터키라는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화총독 담당하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스피치한 것을 보면 앵글로색슨 중심적인 것도 있다. 역사적으로 대항담론을 제시하는 것도 있는 것이 있다. 기독교 문화는 유럽 문화의 원류라고 했는데 그럼 동로마는 유럽 원류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 같다.

터키 가입 문제에 대해선 의식했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유럽이라서 이슬람 터키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유럽이 다양성을 포함한다면 기독교 유럽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들어와야 한다. 터키 이외의 나라들에는 다 포함시켜 주었다.

전재성: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크게는 정치학 내부에서는 유럽 통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능주의, 초국가주의 등 이론들이 너무 많았다. 통합이론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역사적인 어프로치로 통합을 보는 것과 정치학에서 설명하는 방식 사이의 상대적인 장단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신종훈: 유럽통합의 연구사를 썼었다. 사회과학에서 정치학 중심으로 연구,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봐왔는가를 썼는데 적어도 사회과학에서 유럽통합을 보는 것은 90년대 이전까지는 거시이론을 만들려는데 초점, 어떻게 발전가능할 것인가의 전망을 말하기 위해 말했다. 50년대 Hass의 신기능주의 이론이 나왔다. 신기능주의는 low politics의 협력이 high politics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드골에 의해 실패했다. 그 뒤에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 자유주의적 정부 간 협력이 나왔다. 결국 국가 간 협상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나중에 허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엔 대 이론,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측가능한지의 연구는 안 했고, 그 이후엔 다양하게 구성되어온 시스템을 다층적으로 거버넌스하고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발전방향에 대해선 연구하진 않았다. 역사학에서는 유럽통합을 가능하게 한 동인이 뭔가 연구를 해왔다. 유럽의 '이상주의'가 2차 대전 이후, 유럽이 다시 일어날 때 호소할려는 부분도 있었고 이전의 유럽이라는 기억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논한 연구가 있다. 국민국가를 극복하려는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 있었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밀위드의 주장이다. 유럽 이상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참여한 이기심이 유럽 통합을 만들어냈고 살아남기 위해 국가주권을 양도했다고 하는 설명도 있다.

전재성: 기능적인 통합이나 identity based인가이긴 보단 interest based도 identity based, power based가 어떻게 조합되는가의 문제인 듯 것 같다. 어떤 형태에 어떤 식으로. 정체성은 필요에 의해 reinvention되는 것이 있는 듯하다. 계속 현재적 관점에서 갖다 쓸 수 있는데 세계가 어떻게 엮이는지의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현재 미중의 경쟁구도에서 동아시아를 누가 차지하는가? 중국은 전통지역질서에서 reinvention, 미국도 자기 주도로 reinvention을 시도하는데 전체 변수들을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고민이 된다.

조은정: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되었지만 안 되어 있는 점은 유럽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다. 왕정이 살아있고 왕가들끼리 틈틈이 족보를 만들어 본다. 어디서 왔는지 족보를 만들다 보니 미국, 독일, 스웨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 영국. 지금은 사실 없어진 왕정까지 커버하는 혈족들의 맥락이 생겼다. 유럽이 중세의 13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 때부터 공유되는 것, 싸우지만 가족 안에서 싸우는 느낌이 있다. 아무리 싸워도 헤어질 수 없게 되어 있고. top-down이 가능했던 것도 유럽이라는 것이 civil society에서 위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근대 '기획'으로서 2차 대전 이후 급속도로 빨리 만들어진 것은 위에서, 제도로서의 정치엘리트만이 아니라 구시대의 왕족 등 비공식적 연계(informal connection)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 생각한다. 당시의 인식공동체 등도 크게 작용했다.

싱가포르에서 비서구의 IR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룬 학회를 다녀왔다. 카자흐스탄인의 발표는 과연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인 담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유라시아' 지역개념을 가져와서 상황들을 설명하고자 했다. 국가와 지역 사이에 일종의 하이브리

드와 같은 단계들을 만들었는데 region-state, region-economy, region-empire 와 같이 하이브리드 된 단위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라는 개념이 있다가 국가로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라는 개념이 자리잡혔다고 보기 이전에 먼저 들어왔고 '아시아'라는 타자로부터의 정체성이 유입이 되면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것이므로 그 사이의 간극을 그 나름대로 설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유럽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개념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기획을 만드는데 그 간극을 메울 단계들을 마련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실현가능한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신옥희: 어떻게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와 주권의 문제, 하이브리드의 문제가 연결되는 듯하다. 식민의 문제 양안관계, 한반도의 문제. 중간에서 복합화,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의 문제도 있고 중국의 부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못 가게 한다. 힘이 지배하면서 부분적으로 interest, idea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이브리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2nd image reversed를 생각한다. 결국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주권완정론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 있는가?

옥창준: 저는 유럽의 역사적 기억의 부분을 재밌게 들었다. 유럽에서도 재밌는 것이 세력균형이다. 유럽은 제국경험도 있지만 세력균형 체제를 이루면서 제국이 등장하지 못했는데 동아시아는 중화제국이 있고, 그 가운데 서로 상호소원한 관계로서 근대를 지속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저의 관심은 현재 한국인들도 동아시아인들도 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유럽적인 제국주의 기억을 투영시켜서 중화제국 해석 등이 있는 듯하다. 당대 조공질서 해석에도 그것이 너무 위계적인 느낌을 주는데 유럽에서도 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기억이 투영되는 부분은 없었을까 생각한다. 유럽도 여러 국경선 문제들이 역사적 기억들을 만드는데 중요했다. 해양 영토들을 보면 전통시대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독도, 남중국해, 여러 섬들의 문제라는 것이 지금은 중요해졌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동아시아는 유럽의 19세기와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현재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제 해결에는 유럽의 지식들을 소개해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한국인들이 가진 역사적 기억이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데 유럽의 경험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신종훈: 영토분쟁이 유럽처럼 해결되려면 더 파국, 더 갈 때까지 가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 한다. 유럽 정체성, 어느 국가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인정이다. 비인간적인 것을 고백해야 유럽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헤르더의 시기 유대인들에게 유럽에게 들어가기 위한 카드는 세례였다. 이제는 유럽을 들어가는 문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고백이다. 그런 파국을 거치기 때문에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에서 홀로코스트를 고백한 것이 20세기 후반이나 돼서야 하였다. 전쟁 이후 3000년 동안 침묵, 부인했었다. 스스로 소화하기 힘들었다. 20세기가 넘어가기 전, 이전에는 비시정부가 프랑스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가 비시도 프랑스라고 인정했다.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도 유럽연합 들어오기 전에 다 인정하였고 독일도 80년대 후반 인정한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공동의 고백의 측면에서 영토문제, 정신대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